

광주시-지역 국회의원 ‘예산 간담회’

‘2조원 확보’ 사업별 역할 분담 총력전

레이저 R&D 예산 등 黨서 반영 노력

문화수도 관련 사업들 조속 추진 요구

광주시가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결과, 광주시와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2조원 이상의 국비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민주당 차원의 예산 확보=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내년 소요 사업비 152억원 중 40억원 ▲산업용 레이저 핵심 부품 및 모듈 국산화를 위한 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비 60억원 ▲나노 융합 상용화 플랫폼 활용을 위한 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비 17억원 등은 민주당 차원에서 정부 예산안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정세균 대표에게 내용을 보고, 기획재정부 측에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산업용 레이저 부분 지원의 경우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광기술원 방문시 지원을 약속받았고 나노산업의 경우 대구·포항·전주가 공동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공조를 취하면 반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예산=구 전남도청 별관 문제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관련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사업으로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용 20억원과 문화

상품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억원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문화콘텐츠기술(CT) 연구원이 당초 계획대로 광주에 설립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비 33억원도 국회에서 반영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타 예산 확보는 국회의원들이 역할 분담=광주시가 이날 현재까지 정부안에 반영시키지 못해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한 예산 항목은 15개. 이중 민주당 차원에서 3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사업3

개 등 6개를 제외하면 9개 항목이 남는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분담, 국회 상임위에서 반영토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결위에 들어간 강운태·이용섭 의원의 추진력을 믿어 보자는 것. 또 박광태 광주시장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확정하기 전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나라당 의원 등을 직접 만나 단 한 건의 사업이라도 더 정부안에 포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9개 항목 중 광주국립도서관 건립(내년 600억원)의 경우 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예산 반영에 어렵지 않으며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 20억원과 광주R&D특구 지정 및 육성을 위한 예산 77억원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절차적 과정이 끝나지 않아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광주시와 국회의원들은 또 계속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내년 국비지원 예산에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만 포함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 및 교원 숙소 건설 452억원(전액 미반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산 700억원(정부는 200억원만 반영) ▲가전로봇 특화산업 육성 사업비 100억원(정부는 28억원 반영) ▲CGI(컴퓨터 형성 이미지) 센터 건립 예산 100억원(정부는 70억원 반영) ▲진곡산단 진입도로 건설비 400억원(정부 일부 반영 예상) ▲지방도 49호선 건설비 300억원(정부 일부 반영 예상) 등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도 함께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광태 광주시장은 10일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국비요청 사업을 설명하고 정책을 협의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정치권 공조 문제 없다? “소통 부재” 문제 삼던 의원들 “…”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광주시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예산 간담회’는 의외로 싱겁게 막을 내렸다.

그동안 광주시의 예산 확보 과정에서 ‘소통 부재’를 지적해왔던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협력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날 박 시장은 간담회 직후, 광주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내년 국고 예산 확보를 놓고 광주시와 지역 정치

권의 공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그동안 대구, 부산 등 타 지역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예산 확보 내역을 보안에 붙였었다”며 “이러한 과정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올해 예산은 2조원을 넘어서실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며 “특히,

타 지역은 국고 예산에서 SOC 비중이 높은 반면 광주시 국고 예산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산업형’이라는 점에서 ‘질과 내용’이 확실히 다르다”고 강조하는 등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그동안 광주시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공조를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침묵했다.

이는 내년 광주시장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을 아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광주지역 모 의원은 “광주시의 예산 확보 과정에 대해 참으로 할 말이 많다”며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갈등을 빚는 것 보다는 예산을 한 톨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말을 아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광주시가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지역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력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형법 개정 시안 무슨 내용 담았나

법학계가 강간죄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하는 등 기존 형법을 획기적으로 손질하는 개정시안을 내놔다. 형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8차례 개정됐지만, 소폭 개정으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2007년 6월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 개정안을 마련중이며 내년 가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개정시안의 구체적인 내용.

존속대상 범죄 가중처벌 삭제

성적강요죄 신설 성추행 처벌

◇사형제 존치, 종신형제 불필요=사형제 존치론 근거로는 예방적 효과와 시가상조론이 있고, 폐지론 근거로는 생명권 침해와 예방효과가 없다는 점, 오판의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연구회는 사형제 폐지시 형법 각칙을 대폭 수정해야 하며 학회 차원의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판단을 잠정 유보, 일단 사형제를 그대로 뒀다.

사형제도와 무기징역 사이에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오히려 해치고, 형벌의 교육목적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존속대상 범죄 가중처벌 삭제=현행 형법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처럼 우리 형법에는 존속살해와 존속상해, 존속학대 등 존속대상 범죄는 ‘패륜법’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 조항이 따로 있다.

그러나 연구회는 피의자를 동정할 여지가 있을 때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과 가중조항이 없어 도법정형이 ‘5년 이상’처럼 규정돼 법관의 재량으로 충분한 점, 세계적 경향 등을 반영해 존속대상 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은 모두 삭제하라는 의견을 냈다.

◇강간대상 확대·성적강요죄 신설=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에 ‘부녀’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남성이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강제추행형의만 적용했으나 연구회는 남녀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사람을 강간한 자’로 고치도록 했다.

또 최근 고(故) 장자연 사건으로 화자됐던 ‘강요죄’와 관련해 강요에 의해 제3자의 성추행을 받아들이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한 때는 가중처벌토록 ‘성적강요죄’를 신설하라는 입장이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3자의 추행을 받아들이도록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관계를 받아들이게 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라고 개정시안에 포함했다.

강간이나 추행죄를 피해자의 고소 없이 처벌하는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 것도 눈에 띈다. 워낙 중대한 범죄인데다 피의자로부터 고소취소 압박에 시달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다.

◇간통죄·혼인빙자간음 폐지=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6명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결정이 난 간통죄에 대해 연구회는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리의 문제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부관계는 원칙적으로 계약관계라서 간통을 하면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계약의 해소와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인빙자간음죄 또한 여성을 오히려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없는 주제로 비하하는 것이고, 형법이 윤리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형법에서 삭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전기·수도·가스 원가정보 내년부터 공개

전기, 가스, 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정보와 주요 생활필수품의 판매가격이 내년부터 전격 공개된다.

정유사 공급가격의 공개 범위가 확대되며 이동통신요금 인하 가능성도 검토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식료품 등 생활품 물가의 상승세가 서민 경제에 부담된다는 판단 아래

관련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종합비타민, 보청기, 치약, 남성용 화장품 등 생활품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전기료, 열차료, 도시가스, 상수도,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 여력을 확충하고 국내의 가격 동향을 감안해 생활품 원료 또는 완제품의 관세율을 내리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